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8. 31.(화) 총 12매(본문 9, 참고 3)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 과장 정도현, 사무관 이승혁, 사무관 성석언 • ☎ (044) 200-5120, 5131, 5134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인경, 사무관 김선하, 주무관 박지혜 • ☎ (044) 200-6220, 6230, 6231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09:00 이후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 20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6조 3,365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되었다.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 해수부 세출예산(63,063억 원, 2.3%↑)+기후대응기금(302억 원, '22년 신설) 합산 기준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지자체로 소관 변경된 항만 등 관련 예산 1,656억 원 예산을 '21년도 예산에서 제외한 기준('21년 예산 기준 : 61,628억 원 → 59,972억 원)

-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하였다.
-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 예산이 축소(15,896 → 14,980억 원, △5.8%)되어 감소되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 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5조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하였다.

< 2022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 >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A)		'22년 정부안(B)	증감(A-B)	
	본예산(A)	추경			%
◇ 합 계	61,628	62,052	63,365	1,737	2.8
① 해수부 세출예산	61,628	62,052	63,063	1,435	2.3
• 수산·어촌	26,736	27,095	28,005	1,269	4.7
• 해운·항만	21,099	21,164	20,074	△1,025	△4.9
• 해양·환경	11,699	11,699	12,834	1,135	9.7
• 기타	2,093	2,093	2,150	57	2.7
(R&D)	7,825	7,825	8,262	437	5.6
(정보화)	502	502	580	78	15.5
② 기후대응기금('22 신설)	-	-	302	302	순증

-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①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탄소 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③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해양수산부 '22년도 예산안 중점 편성방향 >

- ◆ ①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본격 추진

③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1.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1) 어촌 소멸 대응 : ('21) 6,350 → ('22) 6,479억원(+129억 원, 2.0%)

-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정주여건)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 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 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 ① 어촌공간 재생형(4개소) : 소득·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 등 지원

② 탄소중립형(2개소) :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해 연안지자체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 지원

** 총 3.0조원(개소당 평균 100억원), * 선정계획(300개소): ('19) 70 ('20) 120 ('21) 60 ('22) 50개소

□ (소득·복지)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 ① 도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약 2만여 어가에 직불제 지원 확대(단가 75→80만원, 118→124억원),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 확대(1,000척→1,467척, 81억→119억)

○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 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年 5만명 이용, 0.5억 원 신규), 연안여객항로 지원 확대(161→204억 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 (어촌유입)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 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 원)도 지원한다.

*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희망자에 임대(임대료의 최대 50% 지원)

○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17억 원)도 확대하여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 연안경제 활성화 : ('21) 18,105* → ('22) 19,117억 원(+1,012억 원, 5.6%)

* 항만 SOC 내 지방이양(1,598억원) 제외 규모

□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

* ①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②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③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④제주권(수중레저), ⑤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⑥동남권(친수문화 선도), ⑦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 관광·문화)**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 원)한다.

* ①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19~'23), ②해양치유센터(4개소, '20~'23), ③마리나 비즈센터(2개소, '19~'24), ④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19~'23), ⑤울산 연안체험공원('19~'23)

-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박물관(인천)·과학관(청주) 조성을 지속 추진(485→695억 원)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65→153억 원)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항만·어항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 부산항 신항(916→1,062억 원), 광양항(570→1,157억 원), 새만금신항(744→1,262억 원), 평택·당진항(531→874억 원), 울산신항(1,866→1,898억 원) 등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4,980억 원)을 지속 추진한다.

* 항만시설유지보수(1,221→1,420억 원), 재해안전항만구축(789→1,447억 원) 등

* 부산항 북항(700→819억 원), 기타항만 재개발(158→128억 원), 제주항만(396→426억 원) 등

- 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 탄소중립 실현: ('21) 3,339 → ('22) 4,562억 원(+1,223억 원, +36.6%)

-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그린쉽 확산)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 (2,065억 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관공선 건조: ('21) 21척, 1,261억 → ('22) 28척(신규 11+ 계속 17) 2,065억 원(+804억 원 증액)

-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265억 원)하고,
-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22~’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 (연안·해양 탄소중립화)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 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 1톤당 탄소흡수에 필요한 비용이 육상조림의 20~30% 수준으로 높은 사업 효과성 기대

-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1.7)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 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 원)한다.
-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2~’23년, 4억 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2~’25년, ’22년 31억 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해양환경 관리 강화 : (’21) 1,346 → (’22) 1,964억 원(+617억 원, 45.9%)

□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하여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 60% 감축(현재 6.7만톤 → ’30년 2.7만톤 → ’50년 제로화 달성)

* ’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현재 1,180만 → ’30년 590만㎥)

□ (발생저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571→1,143만 개, ’22년 59.5%→’24년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262→473억 원)한다.

- (수거·처리)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3→6천 톤, 108→169억 원) 및 침적 폐어구(42→54개소, 121→154억 원)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1,000→1,200명) 하며 재난재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도 확대(5→15억 원)한다.
- (해양오염 대응기반) 다목적 대형방제선(5,000톤급, 160→269억 원) 준공을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설치된 노후 폐유수용시설(13개소) 현대화(3→5개소, 9→180억 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침몰선박 잔존유 관리 강화(2→3척, 37→67억 원)를 통해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오염 대응기반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21.4.13), 항만 근로자 안전 사고 등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21) 827 → ('22) 932억 원(+105억 원, 12.7%)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 (유입 감시)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39→45개소)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 원)한다.

* 격월단위 조사정점 확대(13 → 22개소), 수층별 조사 신설(4개소) 등

- (수산물 안전)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 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5억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 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수급안정)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 원)하여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해양수산 안전 강화 : ('21) 1,434 → ('22) 2,035억 원(+601억 원, 41.9%)

□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 (작업안전)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31억 원)를 신규 지원하고,

-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 확충 등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운항안전) 바다 내비게이션(e-Nav*)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177→237억 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163억 원, 신규)**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해상 교통상황, 사고·기상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21.1월 개시)

** 한반도와 부속 도서인근 선박의 위치·항법시각에 대한 초정밀(5cm~18m) 정보를 독자적으로 제공

-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37→76억 원) 지원 등을 통해 선박안전 관리도 강화(341→402억 원)한다.

□ (연안안전)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1→118억 원, 강원 강릉)을 본격 착수한다.

- 또한,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471→593억 원)도 투자를 확대한다.

4.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해양수산 디지털화 : ('21) 613 → ('22) 953억 원(+340억 원, 55.5%)

- 해운·항만 및 수산·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항만·물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어항 3개소, 항만 1개소, 9→31억 원)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1→2개소, 인천·부산*)을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 인천항물류센터('22년 15억 원, 총 400억, '21~'23), 부산항물류센터('22년 11억 원, 총 847억, '22~'24)
- (수산·유통)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5→6개소) 및 청정어장 재생(4→8개소)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226→323억 원)한다.
 - 수산물 신선유통(76→83억 원)·유수식 디지털 양식(50억 원, 신규)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한다.

[2]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 ('21) 1,198 → ('22) 1,971억 원(773억 원, 64.6%)

-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혁신산업육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170→270억 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R&D, 49억 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126→244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 총 313억 원, '19~'23),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총 347억 원, '20~'23), 해조류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완도, 총 250억 원, '21~'23)

- 또한,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72억 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한국형 선주사업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300억 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한다.

-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10→300억 원)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31→50억 원),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53→65억 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 원, 신규)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328→394억 원)을 확대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2022년도 예산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22년 사업내용
1	어촌뉴딜300·어촌활력증진 * 어촌어항재생과 김태경 044-200-6170 해양환경정책과 강정구 044-200-5280	어촌뉴딜 신규사업 50개소(250→300개소) 선정, 어촌활력 증진 시범사업(6개소) 추진 등(5,236억)
2	청년어선임대 * 어선안전정책과장 안용운 044-200-5550	고령 어업인의 어선을 귀어귀촌 청년이 사용 가능하도록 임대료 일부 지원(4.5억)
3	수산물공익직불제 * 수산물직불제팀 김영진 044-200-545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559억)
4	갯벌복원(식생조림) * 해양생태과장 이재영 044-200-5310	갯벌의 탄소 흡수력 강화를 위한 다년생 염생 식물 군락지 조성(2개소, 15억)
5	친환경 선박 보급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044-200-5830 * 해운정책과장 허만욱 044-200-5710	친환경 관공선(28척) 및 민간선박(24척)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2,330억)
6	친환경선박주거혁신기술개발(R&D)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044-200-5830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육상시험·평가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등 지원(88억)
7	친환경 어구 보급 * 어업정책과장 양영진 044-200-5510 양식산업과장 고송주 044-200-563	생분해성 어구, 친환경부표 보급 및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방지(473억)
8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 기술개발 * 해양정책과장 김용태 044-200-5220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능력 규명, 연안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자연해안선 조성모델 개발(58억원)
9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 항만운영과장 정규삼 044-200-5770	무역항(14개) 하역장에 안전사고 예방장비 약 1,500개 지원(31억)
10	수산물 위생관리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 044-200-5610	위·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10대)를 지원하여 생산자 주도의 방사능 감시망 구축(15억)
1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 항로표지과장 김정화 044-200-5870	한반도와 부속도서 인근에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독자적 위성 항법시스템 구축 예비설계(163.43억)
12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 해양환경정책과장 강정구 044-200-5280	대규모 오염사고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5천톤급 대형 방제선 1척 준공 및 운영(269억원)
13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해양개발과장 구도형 044-200-5240	북극해 고위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 연구선 건조(34억원)
14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 해운정책과장 허만욱 044-200-5710	해운업 리더국가 전략에 따른 선주사업, 신규 보증 등 지원을 위한 출자(300억)
15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 수출기공진흥과장 김성희 044-200-5480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비대면 판로 확보 등 수출지원(395억원)

참고 2

2022년 착수하는 신규 항만·어항 인프라 현황

(단위 : 억 원)

위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2예산	기대효과
합 계			11,698	374	
<< 항만 >>					
소 계			7,503	268	
부산	부산항 신항 용원 수로 정비	'21-'24	91	40	수로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방지
전북	새만금신항 방파제 연장	'21-'24	833	1	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한 선박운항 안전성 확보 등
	새만금신항 북측 진입도로	'21-'27	1,729	1	새만금신항 개장('25년) 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 확보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20-'23	120	50	신조여객선 투입 및 여행객 대폭 증가에 따른 혼잡 해소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21-'24	340	25	항내 정온도 확보로 선박 및 항만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 방지	'21-'24	440	25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전남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21-'26	62	25	부족한 배후단지 확충으로 광양항 활성화 기여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 개선	'21-'23	54	35	투기장 내 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투기장 환경 개선
	목포내항 여객부두	'21-'26	489	1	선박 대형화에 따른 부족한 접안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경북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22-'26	2,940	10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후포항 환경개선	'21-'24	298	25	항만 주변 생활SOC를 확충하여 항만 이용 환경 및 경관 개선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21-'23	62	25	기상 악화시 여객선(2척) 동시 접안 및 계류 안전성 확보
경남	마산항 노산로 수제선 정비	'21-'23	45	5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보 및 그 린포트 구축

위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2예산	기대효과
<< 어 항 >>					
소 계			4,195	106	
부산	대변항 관공선부두 등 접안시설 정비공사	'22~'24	434	6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어항시설 자연재해 예방
	천선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22~'24	138	10	항내 정온도 확보로 어민의 인명, 재산 피해 방지
인천	진두항 건설공사	'22~'27	500	5	어업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자연재해 예방
강원	대포항(외옹치항) 정비공사	'22~'24	118	1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장호항 정비공사	'22~'24	274	9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임원항 정비공사	'22~'24	183	7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덕산항 정비공사	'22~'24	116	5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전북	연도항 준설공사	'22~'23	18	5	항 기능 유지 및 선박 안전운항 도모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22~'25	331	9	항내 정온도 확보로 어민의 인명, 재산 피해 방지
전남	우이도항 유지준설공사	'22~'23	20	5	항내 퇴적토사 준설을 통한 선박 안전운항 도모
	서거차항 정비공사	'22~'24	120	5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오천항 건설공사	'22~'26	494	7	어업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자연재해 예방
	남도항 정비공사	'22~'25	212	7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경북	현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22~'25	208	6	항내 정온도 확보로 어민의 인명, 재산 피해 방지
	감포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22~'24	337	7	항내 정온도 확보로 어민의 인명, 재산 피해 방지
경남	장목항 건설공사	'22~'26	426	6	어업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자연재해 예방
	삼덕항 정비공사	'22~'26	266	6	노후 어항시설 정비 및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